"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2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음력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제주 청년보장제'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학생들이 정책발표회가 종료된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청년보장제 향후 5년간 5500억 투입"

어제 제주대 학생회관서 청년보장정책 설명회
상장기업 유치·RIS 사업 등 학생들 질문 이어져
오 지사 "공공분양 70%까지 청년공급" 밝히기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주거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제주에 상장기업이 늘어나면 청년 인재가 (제주를 떠나지 않고)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15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제주도가 개최한 '제주 청년보장제' 정책발표회에서 학생들은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발표자로 나선 이날 행사에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취업, 창업하고 결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제주 청년보장제'"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총 5년 간 117개 사업에 552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짜였다.

제주청년들이 놓인 도내 일자리 환경 악화, 주거비 부담 가중 등의 현실을 보여주듯 그 '해법'에 대한 관심이 컸다. 질의에 나선 오태양(제주대 사학과 4학년) 학생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건으로 '주거'를 꼽으며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공공주택 7000호를 새롭게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공공임대 4900호, 공공분양 2100호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체 물량 중에 청년 몫이 40%가 될 것 같다. 공공분양에 대해선 청년 공급 물량을 70%까지 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질문에 나선 또 다른 학생은 상장기업 육성·유치에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연구개발 기업들의 워케이션 참여가 수도권 기업의 제주 이전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작년과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상장 의지가 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제주기업의 경쟁력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대학이 손잡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도가 올해 교육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산업 등 지역 핵심분야 산업과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지방비 2145억원이 투입된다.

김강연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은 "RIS 사업의 혜택이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 참여 방안을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담당 부서를 통해 이를 검토하겠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제주 청년보장제'는 도내 청년들이 생애주기에 맞게 시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청년 정책을 모두 담은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열고 제주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코디네이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인당 30만원의 진로 탐색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사회진입안정금'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자율예산'을 시범 운영해 청년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줄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윤석열 대통령, 4·3추념식 참석 '불발'

지난 13일 불참 통보… 미국 방문 등 일정 겹쳐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지만, 13일 정부 관계자로부터 내달 3일 열리는 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불참 이유는 일본, 미국 방문 등 주요 국정 일정이 3~4월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일반 재판 대상자에 대한 직권재심의 폭을 확대하는 등 4·3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참석이 불발되면서 도민사회의 실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의 간절한 봄을 대통령과 함께 맞이하고 싶다"며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 원통한 희생자의 원혼을 해원하고, 피맺힌 한을 품고 살아온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재일본 4·3 희생자·유족 보상 지원 강화

제주도, 지난 13일부터 보상금 신청 현지 접수

재일본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 지원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일본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 신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오사카)가 일본 현지에 4·3 전담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보상금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요원 1명을 채용하고 지난 13일부터 배치했다. 또한 제주도청 4·3지원과 4·3보상지원팀에 일본어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재일본 유족들을 위해 일본어로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4월 중 도쿄, 오사카를 방문해 현지 신고 접수기간(5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중앙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외교부 협조를 받아 해외 주소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8개월이 지난 현재(이달 6일 기준) 대상자 4617명 중 3953명(86%)이 접수를 마쳤다. 1차 대상자 2117명 중 93%인 1968명, 2차 대상자 2500명 중 80%인 1985명이 신청해 총 3953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가 완료됐다.

이 중 실무위원회에서 2038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중앙위원회에서도 1468명 희생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종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1468명 중 1421명의 희생자에 대해 청구권자 1만 2212명에게 총 104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태윤기자

캠핑용품 빌리면 캠핑카 무료 '논란'… 4면 / '헌혈 600회' 이영찬씨… 5면